

## 지방자치·종합

##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주거 만족도 30%

주거비·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과제로 꼽아

## ■ 광주발전연구원 '입주민 실태조사'

광주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주거 만족도가 30.9%에 수준에 그치고 있고,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이 꼽혔다.

10일 광주발전연구원은 광주시의회로부터 의뢰받아 광주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10개 단지 입주민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'입주민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' 결과 응답자의 36.3%가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'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'을 꼽았다.

이어 ▲경제적 여건(생업) 개선 25.9% ▲빈곤의 대물림 현상 11.9% ▲주민 편의시설 확보 11.4% 등의 순이었다.

주거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0.9%만 만족한다고 답했으며, 16.9%는 불만족, 51.7%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주거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.

불만족 사유로는 단지 내 음주·고성방(54.8%)과 소음 및 악취(53.7%), 임대료 및 관리비(52.7%) 등이었다.

주거환경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임대료 및 관리비가 24.7%로 가장 높았으며, 이어 주택면적(13.5%), 단지 내 음주(12.7%), 청결 및 하자보수 관리상태(8.0%), 노인 및 장애인 편의성(6.9%), 소음 및 악취(6.5%) 등이었다.

취(6.5%) 등의 순이었다.

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는 65.9%가 생활비 및 생계지원을 꼽았으며, 이어 의료서비스(30.6%), 노인 돌봄 서비스(16.9%), 직장 알선과 직업훈련(15.9%) 등의 순이었다.

아파트 내부시설 개선 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.4%가 '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'를 꼽았고, 이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단지 및 내부 시설 개조(28.9%), 공동전기요금 지원(26.3%),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및 분할 납부(25.8%) 순으로 나타났다.

조사대상 입주민들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9만7000원으로 나타났으며,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9.7%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으로 집계됐다.

특히 가구주의 직업이 70.9%가 무

직이었고, 입주민 가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가구당 평균 0.5명에 불과했다. 또한, 가구 수입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1.0%

가 기초생활보조급여 의지해 생활하고 있으며, 25.8%는 기초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, 16.2%는 직장 급여, 13.9%는 자녀의 도움, 10.2%는 국가 기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.

광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"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실태와 관련된 최저주거환경기준을 주거지표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"고 지적했다.

한편,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회의실에서 '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결과 보고회'를 열었다.

/최금기자 cki@kwangju.co.kr



광주시의회는 10일 5층 회의실에서 문상필 환경복지위원회장을 비롯한 정병문·조오섭·허문수·강은미·홍인화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'영구 임대아파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발표회'를 열었다.

/김진기자 jeans@kwangju.co.kr

## 현정부 인사청문 대상자 82%

## 세금탈루·투기·위장전입 해당

靑 경호처 5급이상 영남 35%

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인사 10명 중 8명 폴로 세금탈루·부동산투기·부동산투기·병역기피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.

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박우순 의원이 10일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제

출발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대상자였던 공직자는 이달 말 현재 총 89명(중복인원 포함) 95명으로 이 중 73명(82.0%)

이 세금탈루·부동산투기·위장전입·병역기피·논문표절 등 이른바 '4+1 필수 불법과목'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탈세 또는 탈루·체납 등 세금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 의혹 13명(14.6%) 순이었다.

인사청문 대상자 89명 중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동기·김 사원장 후보자·천성관 겸찰총장 후보자 등 8명이 낙마해 낙마율은 9.0%였다.

노무현 정부 시절 58명 중 2명이 낙마해 낙마율이 3.4%인 것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. 박 의원은 또 3개 항목 이상에서 의혹이 제기된 27명 중 22명(81.5%)에 대해 임명이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.

한편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'경호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직급별 출신 현황' 자료를 토대로 "대통령 경호처의 3급 이상 직원들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총 43명 중 22명(51.2%)이 영남 출신으로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"고 지적했다. 5급 이상 242명 중 34.5%가 영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은 21.6%였다.

그러나 직급별로 보면 정원이 1명인 1급에 영남 인사가 임명된 것을 비롯해 2급 7명 중 5명이 영남 출신으로 채워진 데 비해 광주·전남 출신은 1·2급은 없고 3급 이상 고위직 중에도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출발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대상자였던 공직자는 이달 말 현재 총 89명(중복인원 포함) 95명으로 이 중 73명(82.0%)

이 세금탈루·부동산투기·위장전입·병역기피·논문표절 등 이른바 '4+1 필수 불법과목'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탈세 또는 탈루·체납 등 세금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6%), 병역기피 의혹 16명(18.0%), 표절 등 논문관련

의혹이 57명(64.0%)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(49.4%), 위장전입 의혹 29명(32.